ChungNam Report
충남리포트 Vol.311
2018. 6. 15.

#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 변화와 결정요인

**이 관 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krlee@cni.re.kr

본 연구는 충남 농가소득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통해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농가소득 증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CONTENTS

1. 충남 농가소득과 3농혁신정책
2. 농가소득의 재정의와 분석자료
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요 약

-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상승하는 추세임.
- 2015년 현재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1,318.5만원이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129.4만원임
-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농가 육성과 더불어 채소와 과수농가를 육성해야 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토지, 기계기구, 사육가축 등의 자산규모를 확대해 규모화를 달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확보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적 관점에서는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집행방식 전환을 마련해야 함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농촌사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01 충남 농가소득과 3농혁신정책

● 충남도는 2011년부터 3농혁신정책을 도정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음.

- 3농혁신정책은 농업·농촌정책의 중요성 부각과 패러다임의 전환, 3농혁신위원회와 3농대학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시군-유관기관의 농정 협력네트워크 강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음(이관률, 2014).
- 한편, 3농혁신정책을 통해서 충남의 농가소득이 실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지역정치권과 지역 언론 등에서는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평균 농가소득(3,472만원)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3,721만원)보다 낮다고 지적함.

- 농가경제조사의 전국 표본은 2,600농가이고, 이중 충남의 표본은 250농가임. 이는 전국농가수의 0.25%에 해당함.

● 충남의 농가소득이 낮다는 정책적 지적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이 요구됨.

①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전국과 어떻게 다른가?

②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과 차이가 있는가?

③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국과 무엇이 다른가?

④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02 농가소득의 재정의와 분석자료

## 1. 농가소득의 재정의

●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이란 1년 동안 농가가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임.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존의 농가소득 개념에는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혼재하고 있음.

–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농업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의 합을 의미함.

–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과 농업피해보상금의 합임.

[표 1] 농가소득의 재분류

| 재분류 | 농가소득의 구성 | 기존 분류 |
|---|---|---|
| 농업기반 농가소득 (농업소득+겸업소득–농업피해보상금)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 | 겸업소득 | 농업외소득 |
|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사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농업피해보상금) | 사업외소득 | |
| | 공적보조금 | 이전소득 |
| | 사적보조금 | |
| | 비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 농정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농가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중심이 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기반 농가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최근 10년간(2005~2015년)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함
  -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는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은 2013년과 2015년만 사용하도록 함.
  - 농가경제조사의 제8차패널(2005~2007), 제9차패널(2008~2012), 제10차패널(2013~2015)별로 조사 농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패널분석에서는 제10차 패널만 사용하도록 함.

-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와 지역별 평균차이 분석
  -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별 차이분석은 각 연도별로 분산분석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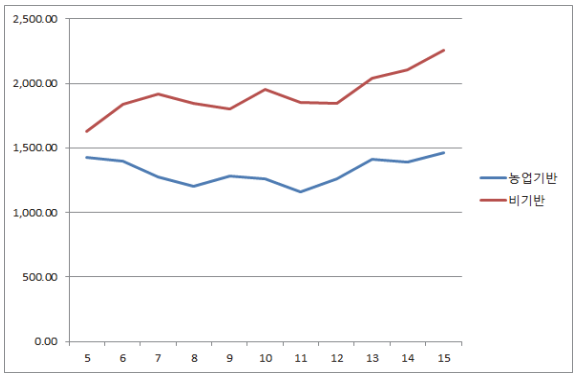
# 0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

## 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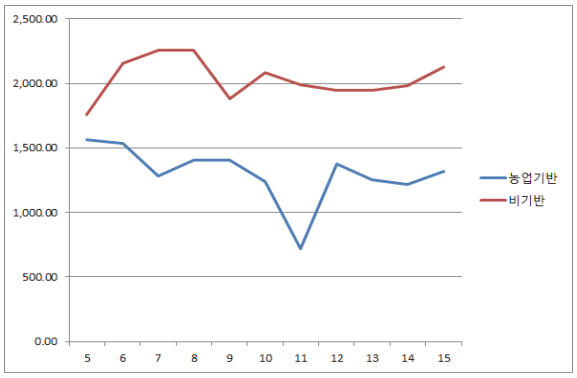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1,464.5만원이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257.0만원임.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423.3만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1,162.1만원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에 1,464.5만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5년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1,627.0만원으로 시작하여 증감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2,257.0만원까지 성장함.

- 2015년 현재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1,318.5만원이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129.4만원임.
  - 지난 10년간 충남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564.8만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718.1만원까지 하락한 후 2015년에 1,318.5만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005년 1,756.7만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 2,258.7만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5년 현재 2,129.4만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임.
  - 그러나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규모가 연간 1,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우리나라의 변화추이




충남의 변화추이

[그림 1]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 2.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지역별 차이분석

- 각 패널별 시작연도와 끝나는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에 대한 지역별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음.

-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5년의 6개 시점에서 모두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를 비롯한 9개 지역(도 단위)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모두 유사한 수준임.

[표 2] 지역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단위: 만원)

| 구분 | 2005 | 2007 | 2008 | 2012 | 2013 | 2015 |
|---|---|---|---|---|---|---|
| 전국 | 1,423.3 | 1,278.3 | 1,203.3 | 1,258.0 | 1,414.7 | 1,464.5 |
| 경기 | 1,394.9 | 1,405.8 | 1,219.3 | 1,339.3 | 1,334.9 | 1,308.0 |
| 강원 | 1,343.9 | 1,149.3 | 1,300.5 | 1,085.5 | 1,395.0 | 1,387.9 |
| 충북 | 1,282.9 | 1,176.0 | 1,028.2 | 919.7 | 1,483.8 | 1,592.4 |
| 충남 | 1,564.8 | 1,279.0 | 1,406.1 | 1,377.5 | 1,253.9 | 1,318.5 |
| 전북 | 1,421.3 | 1,287.1 | 1,216.1 | 1,122.5 | 1,285.6 | 1,334.7 |
| 전남 | 1,380.3 | 1,147.1 | 1,085.6 | 1,137.4 | 1,492.4 | 1,553.8 |
| 경북 | 1,491.4 | 1,270.4 | 1,394.3 | 1,559.5 | 1,784.8 | 1,805.8 |
| 경남 | 1,277.8 | 1,258.5 | 943.2 | 1,048.0 | 1,104.1 | 1,333.3 |
| 제주 | 1,991.5 | 1,831.1 | 1,749.8 | 1,425.7 | 1,423.8 | 1,195.9 |
| F값 | 1.64 | 1.18 | 1.93 | 1.23 | 1.62 | 0.98 |
| prob | 0.1094 | 0.3063 | 0.0513 | 0.2794 | 0.1144 | 0.4502 |

## 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자산 등의 농업자산과 전업/겸업, 주업/부업, 연령과 성별, 영농형태,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을 설정하였음.

- 전국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에서는 주업/부업 형태 중 전문농가와 일반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2종겸업농가, 농업피해보상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 외 농업자산, 전업/겸업, 연령, 성별, 농업공적보조금, 사업외소득 등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에서는 주업/부업 중 전문농가만이 (+) 영향을, 영농형태 중 화훼농가는 (−) 영향을, 그리고 기타농가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농업자산, 전업/겸업, 연령, 성별,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0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자산의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자산은 전국과 충남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농업자산에 대한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전업/겸업의 여부는 농가소득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는 전국과 충남에서 동일한 결과로 추정되었음.

- 주업/부업에서는 전국 차원에서는 전문농가와 일반농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충남 차원에서는 전문농가만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충남의 경우 일반농가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투입이 요구됨.

- 연령과 성별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영농형태는 전국과 충남의 추정결과가 다소 상이하였음. 전국 차원에서는 과수, 채소, 축산, 2종겸업 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충남은 오직

기타농가만이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화훼농가는 오히려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최근 충남은 전국과 상이하게 논벼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과수, 채소 등으로 재배품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농가소득에 (-) 영향을 미치는 화훼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공적보조금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따라서 현행의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피해보상금은 전국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충남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재해보험가입과 같은 간접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외소득은 전국과 충남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외소득은 농촌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 관 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041-840-1204, krlee@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 전략연구과제 "농가소득과 부채의 시계열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참고자료


강혜정 외(2011), “농업교육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율 추정”,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상 외(2013),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김미복(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이 외(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3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박종훈 외(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제20권 제4호, 한국농촌계획학회.

오내원 외(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영석 외(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관률(2014),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농정연구, 제49호, 농정연구센터.

이해림 외(2016), “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임정빈(2014), “2014년 미국 신농업법의 농가소득지원 정책분석”, 한국국제농지, 제26권 제3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정진화 외(2013), “한국농가의 고령화와 농가소득에의 영향”,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충청남도(2013), 함께하는 3농혁신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입니다(2013년 3농혁신 추진계획).

황재희 외(2016), “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변화”, 농촌경제, 제3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